

윤, 오늘 총선 입장 발표...국정새신 의지

민심이반 수습 절실...자성, 쇄신 담길 듯

비서실장·총리 등 인적 쇄신 이어질듯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참패'로 나타난 4·10 총선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힐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총선 결과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쇄신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쇄신' 방안과 함께 총선 민심에 대한 자성, 협치를 위한 노력 등을 담은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은 총선 책임과 변화 의지에 대한 짧은 입장을 발표할

뒤 별도의 정식 대국민 담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총선으로 드러난 심상치 않은 민심에 대한 자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가 자신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공천이나 정책 경쟁보다 '정권심판' 구도로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은 108석에 그쳤고, 리얼미터가 8~12일(총선 당일 10일 제외)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4.7%포인트 내린 32.6%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심 이반

을 수습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출국 논란을 비롯해 민심에 악영향을 끼친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에 대한 성찰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국정 쇄신' 방안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낸 바 있다.

국정 쇄신은 각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국정에 반영하는 '유연한태도'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핵심 개혁 현안인 의료개혁의 경우, 지난 1일 대국민 담화가 51분간 발표로 이뤄져 '일방적 전달'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

정책 자체는 국민의 지지를 구하면서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 없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개선의 선결 조건이라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핵심 관건으로 떠오른 '협치'에 대한 생각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집권 후반기 국회에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선을 넘긴 거대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부 주도 국정운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집권 중간 선거에서 패배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년처럼 야권 단독 법안에 거부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총선 전 24차례 이어진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입법과제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뉴시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제도 개선 모색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췄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좌장을 맡고,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이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전문가 토론회에는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 기우식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최창구 광주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 양철수 광주연구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채 의원은 "한해에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각종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수"라며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와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7월 광주시 추경정예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년째 표준운송원가 산정, 경영평가, 정산검사 등을 누락하거나 허술하게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도기 기자

文 "野승리에 기여" 조국 "어깨 무거워"

조국혁신당 당선인 등 12명,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진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의 4·10총선 성과에 대해 "정권 심판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고 조 대표는 "어깨가 무겁다"며 말했다. 두 사람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덕담을 주고 받았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대표 등 1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이날 워크숍 첫 일정으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 안쓰러움에 멈추지 않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만의 성공에 그

치지 아니하다"라며 "정권 심판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자부심 가져도 좋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정당의 리더십과 문화 보여줬듯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조 대표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한 달 정도 된 신생 정당이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결과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우리가 가진 역량보다 훨씬 더 크다. 다른 정당들에 대한 기대보다도 더 큰 것 같다"고도 말했다.

조 대표는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며 문 전 대통령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명시적 변화 안보이면 윤 만날 생각 없다"

이준석 "대통령실, 회전문 인사하면 강하게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어도 박정호 대령 문제를 갖고 전향적 입장을 보이거나 꼬인 실타레를 풀기 전까지 만날 생각이 절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야권에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가 범야권이든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 오히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협치 이미지를 위해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국 대표께서 너무 조급스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만약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께서 윤 대통령을 만날 기회

가 생긴다 하시더라도, 저에게도 혹은 사나 그런 기회가 생긴다 해도 전 반드시 만남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협치 이미지를 부여하고픈 생각이 없다"며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 바로 잡았으면 하는 것들이 명시적 변화를 보일 때, 용산과 국회 협력에 강화를 거라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일주일도 지나도록 대통령께서 아직 국민에게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일부 호사가들에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인사들이 사표냈지만, 후임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서 다시 회전문 인사로 재기용될 거란 얘기가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개혁신당은 강한 어조로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경찰, 총선 낙선 장애인 소환 '슈퍼챗 후원금' 의혹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무소속 출마했다 낙선한 장애인 전 국민의 힘 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장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해 자진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 힘 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장애인TV'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슈퍼챗 기능을 활성화 해 2000원에서 말게는 1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슈퍼챗'이란 유튜브 생방송 중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가 유튜브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전남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 위원 고발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내사를 벌여왔고,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미 장 전 최고위원 측이 소환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평화의 소녀상 테러 용납 안돼...엄정한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부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테러의 대상이 된 것과 관련 "우리 사회가 역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 테러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다윗 삼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검은 비닐이 씌워지고 '헐거'라고 적힌 마스킹이 부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이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도 함께 테러의 표적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역사의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수난을 당한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테러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교례회. 1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교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교례회에는 광주지역 당선인 8명, 전남지역 당선인 10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야당, 이종섭·김건희 겨냥 특검 재추진

내달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처리 가시화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크게 패배하면서 각종 특검법 추진이 동력을 얻고 있다. 검찰의 실아있는 권력 수사 미진한다고 주장하며 각종 특검을 띄우는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권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특검법 추진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건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채보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펴의 논문표절 의혹도 특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공통점은 검찰 혹은 경찰과 같은 기존 수사기관이 현 정권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의혹이다.

김 여사 특검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명품가방 수수, 양평 고속도로 중점 변경 등이 거론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야권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대표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운 전북 전주를 당선인전 서울고검장은 자신의 책에서 "윤석열 검찰에 수사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계파를 제 공한 다수 중 한 명이기에 때문에 공모 관계가 입증되기 위해선 추가 물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은 사건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지난해 9월 발의)된 특검법 수사대상은 ▲사망사건 원인 규명 ▲수사외압 여부 규명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현재 사직시킨 경우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발의한 추가 특검법을 병행시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방안 등이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공개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경태 부산 사하을 당선인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등이 이날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철수 경기 분당갑 당선인은 지난 12일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국힘 중진 '비대위 구성 후 전당대회' 뜻 모아

"가급적 빨리해야"...원내대표 결정 안돼

국민의힘 중진들이 15일 차기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당권당국상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선 실무 절차 진행을 위해 비대위 체제가 꾸려져야 한다.

이날 오전 윤재옥 원내대표와 조경태·권영세·권성동·한기호·윤상현·나경원·박덕홍·안철수·김상훈·이양수·이종배·이현승·김도읍·윤영석·김태호 의원 등은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 절차와 의료 대란 문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응 전략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중진 의원들을 모시고 당 체제 정비 방안을 포함한 여러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며 "내일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지도 체제에 대해서 "그런 논의

의 없었다"며 "오늘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국회의장이) 출장 마치고 오시면, 양당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하고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총선 패배에 대해서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적절한 시기에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며 "당헌당규상 구성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해야 복귀"

사직 전공의 1360명, 복지장·차관 고소... "직업자유 방해"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이 단체로 징석 상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월 사직이 시작된 지 50여 일 만에 처음이다.

분당차병원을 사직한 정근영씨를 비롯한 전공의 20명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회(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

반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전 전공의들은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정제는 이번 고소에 참여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대표해 이날 우편으로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피고소인으로는 박 차관 외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포함됐다. 이번 고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차원이 아닌 전공의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